

[장수원 사회] 기출문제 분석

2018년 국가직 ④책형 정답 및 해설

총평

최근 3년간 치뤄진 국가직에 비해 난이도가 있게 출제 되었습니다. 제시문이 비교적 길고 자료 분석 문제(3번, 15번)나 제시문의 독해를 요구하는 문제(12번, 14번),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문제(20번) 등이 출제되어 시간이 촉박했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90점 이상의 점수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시험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정치 - II.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의원 내각제적 요소)

대통령제적 요소	의원 내각제적 요소
•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실권 행사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 의회의 탄핵 소추권 행사 • 의회의 행정부 불신임권과 행정부의 국회 해산권 불인정	•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가능 •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 국무총리제 • 내각과 유사한 국무회의 설치 •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발언권 • 대통령의 임시 국회 소집 요구권 •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

- ① (○)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존재하고 국무총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관장하는 국무총리를 두고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 ② (○)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은 행정부 각료로 임명될 수 없지만,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의원의 각료 겸직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하며, 이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 ③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적 요소입니다. 반면,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이므로 비교해야 합니다.
- ④ (○)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없지만,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내각 불신임과 유사한 제도인 국회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2.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정치 - I.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사회 계약설(루소와 홉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얽매어 있다’는 표현과 ‘일반 의지에 입각한 국가를 구성’한다는 표현을 통해 갑은 루소의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인하여 야수적이며 단명하는 삶을 영위한다’라는 표현을 통해 을은 홉스의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 ① (×) 루소는 계약에 의하여 국가가 창설되고 사회 질서가 형성되게 되면 일반 의지의 명령에 따라 사회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공동선을 추구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 이것들의 총화가 바로 ‘일반 의지’이며, ‘일반 의지’는 특수한 이해에 입각한 개개인의 의지와도 구분되며, 이러한 개개인의 의지(특수 의지)의 총합에 불과한 전체 의지와도 구별되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 ② (×) 루소는 자연권의 양도를 부정하면서 시민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직접 민주정치를 강조하였습니다. 입헌 군주정은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약을 받는 정치 체제로 대의제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 형태입니다. 입헌 군주정을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본 사람은

입법권 우위에 2권 분립론을 강조한 로크의 주장입니다.

- ③ (×) 홉스와 로크, 루소 모두 국가는 목적이 아닌 개인의 자연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 ④ (○) 홉스는 왕권신수설을 부정하고, 사회 계약설에 기초한 군주 주권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홉스를 포함한 모든 사회 계약론자들은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구성원의 동의에 근거한다고 봅니다.

3.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정치 - II.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선거 관련 자료 분석 문제

제시된 조건을 바탕으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 대표 의석수, 총 의석수를 구하면 표와 같습니다.

정당	지역구 의석수	비례 대표 의석수	총 의석수
A	98	43	141
B	42	32	74
C	24	15	39
D	36	10	46
합계	200	100	300

- ① (○) 2017년 갑국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선거에서 지역구 기초의회선거 선거구제와 동일합니다.
- ② (○) 2017년 갑국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이고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입니다.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를 하지 않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이 유리합니다.
- ③ (○) 2017년 갑국의 국회의원선거에서 가장 의석을 많이 차지한 정당은 A당으로 전체 의석(300석)의 과반인 151석에 10석이 부족한 141석이므로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 ④ (×) 2017년 갑국의 국회의원선거에서 B와 D의 지역구 의석 점유율의 합은 $39\% \left(= \frac{42+36}{200} \times 100 \right)$ 이고 B와 D의 정당 득표율 합은 $42\% (= 32 + 10)$ 입니다. 따라서 2017년 갑국의 국회의원선거에서 B와 D의 지역구 의석 점유율 합은 B와 D의 정당 득표율 합보다 더 작습니다.

4.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정치 - 교과서 밖

[출제영역] 권력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변화

- ㄱ. (○) 단원제는 의회를 상원과 하원인 양원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만 두는 제도이고 양원제는 의회를 상원과 하원인 양원으로 구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원제는 양원제에 비해 신속한 국정 처리와 의회 운영 경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졸속 입법의 가능성과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양원제로 바꾸면 졸속 입법을 방지할 수 있고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다를 경우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물론 양원제를 실시할 경우 상원과 하원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의안 통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 제도를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바꾸면 의회 구성이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지므로 권력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ㄴ. (○)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면서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이양하면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력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ㄷ. (×) 소수 대표제는 득표순으로 한 명이 아닌 일정 인원을 당선시키는 제도이고 다수 대표제는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시키는 제도입니다. 소수 대표제에서 다수 대표제로 대표 선출 방식을 바꾸면 다수당에게 유리하여 양당제의 정착을 통한 정국 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의회 권력이 거대 정당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권력 집중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ㄹ. (○) 행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시장에 대해 긴축 정책보다는 확장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띕니다. 이런 확장 정책은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으나 통화량의 증대로 인한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로부터 중앙은행(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금융 정책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권력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정답] ③

[출제단원] II.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평등 선거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 분석

- ① (X) 헌법 재판소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의 기준을 기존 3대1에서 2대1로 변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인구 편차의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하여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야기하게 되어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선거에서 평등 선거의 원칙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 ② (X) 인구 대표성이란 평등 선거의 원칙을 고려하여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가 크지 않아야 한다는 선거구 획정 원칙이고 지역 대표성이란 지역이나 행정 구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선거구 획정 원칙입니다. 인구 편차를 줄여야한다는 헌법 재판소의 판례는 지역 대표성보다 인구 대표성을 중시한 판례입니다.
- ③ (O) 예를 들어 최대 선거구의 인구는 30만 명, 최소 선거구의 인구는 10만 명이라고 가정하고, 각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하고 모든 유권자가 투표했다고 한다면, 최대 선거구 유권자의 표의 가치는 30만분의 1, 최소 선거구 유권자의 표의 가치는 10만분의 1이 되어 최대 선거구의 표의 가치가 최소 선거구의 표의 가치보다 과소 대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편차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그 만큼 유권자 표의 등가성의 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④ (X) 선거구 법정주의에 따라 선거구는 국회가 만든 법률로 확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따라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 기준인 2:1을 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6.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정치 - IV. 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부동산의 매매 절차

- ① (X) 매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을)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이전받은 경우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아파트(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② (O) 매수인(을)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도인(갑) 아파트 등기부를 열람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의 안전을 위해 실제 매도인과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등기부의 열람은 집 주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 ③ (O)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도 가집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지급된 때에는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매수인(을)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갑)은 지급받은 계약금의 2배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합니다.
- ④ (O) 매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가 합치된 때’에 성립합니다. 이런 매매 계약의 체결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7.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정치 - V. 사회 생활과 법

[출제영역] 형사 절차의 이해

- ㄱ. (X) 갑이 을에게 저야하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은 민사상 책임이고 갑이 을에게 가한 폭행에 대한 형사상 책임은 별개입니다. 다만, 갑과 을이 폭행에 대한 민사상 손해 배상에 합의하면 갑의 형사 책임이 감경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ㄴ. (X) 형사 재판의 원고는 검사입니다. 다만, 피해자인 을은 형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갑이 지은 범죄 혐의에 대해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 ㄷ. (O) 을은 갑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을은 민사 소송 이외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민사적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ㄹ. (O) 피의자와 피고인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8.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 정치 - V.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제조물 책임법

갑은 제조물인 TV의 결함으로 신체상의 손해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제조사인 회사(을)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 제조업자가 제조물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책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조문] 제조물 책임법 제4조 (면책사유) 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

이에 따라 ①, ②, ④의 경우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여 회사 을이 제조물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③의 경우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 을이 제조물 책임을 져야 합니다.

9.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정치 - V. 사회 생활과 법

[출제영역] 형사 절차의 이해

-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 수사의 원칙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 등이 있을 경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검사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피의자를 반드시 기소하여야 한다. (X) →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 유예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고,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 한다. (X) →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항고’가 아닌 ‘항소’라고 합니다.
 - 형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한다. (X) → 형의 집행은 행정 작용으로 판사가 아닌 검사가 지휘합니다.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X)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은 것은 집행 유예입니다. 즉,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 따라서 설명 중 옳은 것은 1개입니다.

10.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정치 - III.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헌법재판소

- ① (O)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헌법 제111조 ②항)
- ② (X)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

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집니다.(헌법 제107조 ②항)

③ (○)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50조)

④ (○)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헌법 제113조 ①항)

11. [정답] ②

[출제단원] 사회문화 - III. 문화와 사회

[출제영역] 문화의 속성

○ (가)의 제시문의 사례는 문화의 각 요소들은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고 전체적으로 통합성을 가진다는 것으로 총체성(전체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 (나)의 제시문의 사례는 문화는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라 후천적 학습에 의해 형성되는 생활양식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학습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12. [정답] ④

[출제단원] 사회문화 - II.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사회 실재론

제시문에 나타난 에밀 뒤르캄의 입장은 개개인의 특성을 뛰어넘는 집단의 고유한 속성이 존재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만이 가진 고유한 속성이 존재하고 이것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의 입장입니다.

① (x)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고 보는 관점은 사회 명목론의 입장입니다.

② (x) 인간 스스로가 희망하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강조하는 사회 명목론의 입장입니다.

③ (x) 사회 제도의 구속성보다 개인의 자율성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의 입장입니다.

④ (○) 개인의 행위의 능동성보다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 실재론의 입장입니다.

13. [정답] ③

[출제단원] 사회문화 - II.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일탈 행위론(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차별적 교제 이론)

(가)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의 관점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머튼은 일탈의 원인을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에서 찾습니다. 제시문에서 경제적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문화적 목표라면 합법적인 기회는 제도화된 수단입니다.

(나)는 차별적 교제 이론의 관점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별적 교제 이론은 개인이 일탈자들과 접촉하면서 범죄 행동을 학습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차별적 교제 이론을 달리 학습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 ㄴ, ㄷ의 표현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관련 있고, ㄱ, ㄹ, ㄱ의 표현은 차별적 교제 이론과 관련됩니다.

14. [정답] ①

[출제단원] 사회문화 - V. 사회 제도와 사회 변동

[출제영역] 사회 진화론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회 변동의 방향에 대한 관점에 따라 진화론과 순환론으로 나뉩니다. 제시문에 나타난 관점은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사회가 단순한 사회에서 복잡한 사회로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한다는 진화론의 관점입니다.

ㄱ. (○) 진화론은 사회가 겪는 발전 단계를 서구 사회를 기준으로 만들어서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서구 사회는 보다 발전된 사회, 서구 사회가 밟아온 발전 단계를 아직 겪지 않은 사회는 발전되지 않은 사회로 규정되었고, 서구 사회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미발전 사회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후진 사회를 착취하거나 식민지로 삼았습

니다.

ㄴ. (○) 진화론은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으로 단선적으로 진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ㄷ. (X) 장기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퇴보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은 순환론입니다.

ㄹ. (X) 사회 변동을 순환과정으로 보는 것은 순환론입니다.

15. [정답] ①

[출제단원] 사회문화 - IV.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 계층 관련 자료 분석 문제

제시된 자료를 통해 갑국과 을국의 중층 구성원의 비율과 계층 구조를 추론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

갑국			을국		
	1980년	2010년		1980년	2010년
상층	20	20	상층	20	30
중층	30	50	중층	50	20
하층	50	30	하층	30	50
계층 구조	피라미드형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다이아몬드형	모래시계형

① (○) 갑국은 피라미드형에서 다이아몬드형으로 계층 구조가 변하여 안정적인 사회 계층 구조로 변하였습니다.

② (x) 을국은 2010년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로 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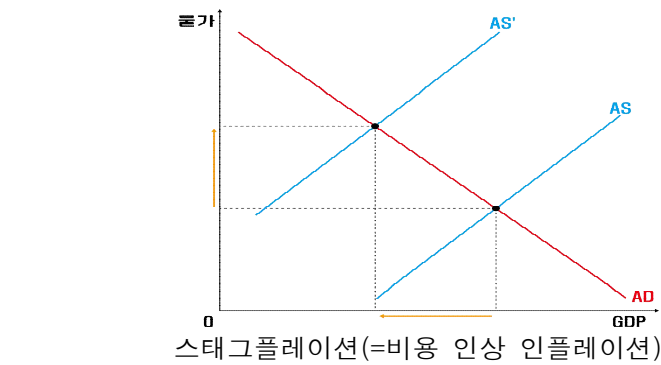
③ (x) 폐쇄적인 계층 구조와 개방적 계층 구조는 계층 이동의 가능성에 따른 계층 구조의 분류입니다. 제시된 자료는 계층 구성원의 비율에 따른 계층 구조의 분류로 폐쇄적 계층 구조인지 개방적 계층 구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갑국과 을국의 계층 구조의 변화는 개방적 계층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x) 을국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에서 모래시계형으로 변하였습니다.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는 중산층의 몰락으로 사회적인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을국의 계층 구조 변화는 사회 복지 제도의 확충의 결과가 아닌 사회 복지 제도가 제도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고 볼 수 있고 사회 복지 제도를 확충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IV.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스태그플레이션



ㄱ. (X)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은 충분한 생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수요 부족으로 발생한 극심한 경기 침체로 물가도 동시에 하락한 디플레이션의 사례입니다.

ㄴ. (○) 생산 요소의 가격 상승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ㄷ. (○)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 GDP의 감소에 따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17.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V.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무역 이론(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

양국의 신발과 전화기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A국	B국
신발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전화기 7/9단위	전화기 6/5단위
전화기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신발 9/7단위	신발 4/5단위

- ㄱ. (O) 신발과 전화기 생산 모두 B국이 절대 우위에 있고 A국은 절대 열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서로 교역을 할 유인이 발생하지 않아 무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ㄴ. (X) 신발 생산에 대한 절대 우위는 B국에 있지만 비교 우위는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이 작은 A국에 있습니다.
- ㄷ. (O) B국은 신발 생산에 절대 우위와, 전화기 생산에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가 모두 있습니다.

18. [정답] ①

[출제단원] 경제 - II.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출제영역] 세율 적용 방식에 따른 조세의 분류(비례세)

그림과 같은 조세 제도는 과세 대상 금액에 따라 일정하게 과세액이 증가하는 비례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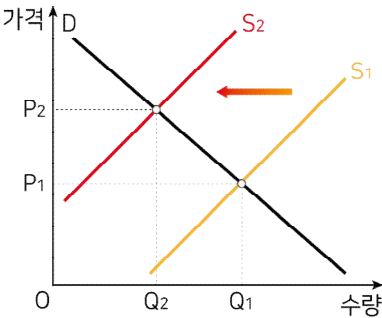
- ① (O) 비례세는 과세 대상 금액과 무관하게 세율이 일정합니다.
- ② (X) 누진세가 아닌 비례세 방식입니다.
- ③ (X)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과세 대상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입니다.
- ④ (X) 비례세는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초래되어 저소득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19.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III.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시장 균형 변동 요인의 추론

X재의 균형 가격을 높이는 동시에 균형 거래량을 줄이는 요인으로 대표적인 것은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뿐만 아니라 공급이 감소하면서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공급의 감소폭이 수요의 증가폭이나 감소폭보다 큰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 ① (X) X재와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의 가격 하락은 수요 감소 요인으로 X재의 균형 가격을 낮추는 동시에 균형 거래량을 줄이는 요인입니다.
- ② (X) X재는 정상재이므로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 향상 수요 증가 요인으로 X재의 균형 가격을 높이면서 동시에 균형 거래량을 늘리는 요인입니다.
- ③ (O) X재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공급 감소 요인으로 X재의 균형 가격을 높이는 동시에 균형 거래량을 줄이는 요인입니다.
- ④ (X) 해외로부터 X재 수입의 증가는 공급 증가 요인으로 X재의 균형 가격을 낮추는 동시에 균형 거래량을 늘리는 요인입니다.

20.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IV.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고용 지표의 변화 추론

○ A국에서 생산 가능 인구(노동 인구) 10,000명 중 비경제 활동 인구가 40 %이면 비경제 활동 인구는 4,000명이고 경제 활동 인구는 6,000명입니다. 이에 따라 선택지를 적용하면 표와 같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명)	비경제 활동 인구(명)	경제 활동 인구(명)	실업자 수(명)	취업자 수(명)	고용률 (%)
10,000	4,000	6,000	200	5,800	58
10,000	4,000	6,000	300	5,700	57

고용률 = $\frac{\text{취업자 수}}{\text{생산 가능 인구}} \times 100$

○ B국에서 실업률이 2 %이고 실업자가 300명이면 경제 활동 인구는 15,000명입니다.

실업률(2%) = $\frac{\text{실업자 수}(300)}{\text{경제 활동 인구}(X)} \times 100$

이에 따라 선택지를 적용하면 표와 같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명)	경제 활동 인구(명)	실업률(%)	실업자 수	경제 활동 참가율(%)
30,000	15,000	2	300	50
25,000	15,000	2	300	60

따라서 A국과 B국에 들어갈 숫 중 모두 옳은 것은 ②번입니다.